



#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도입 배경 및 사회경제적 효과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연구원)

## ■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경제는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4.3%의 성장률을 기록하리라 예상하고 있다<sup>1)</sup>. 이렇게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는 실업률은 현 스웨덴 정부에게 계속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산업구조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대규모, 대량 및 집단 생산을 추구하는 제조업 대신,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스웨덴의 경제 및 산업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스웨덴 내의 산업구조의 변경은 고용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였다. 2009년의 경우를 볼 때 공공부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 고용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고용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스웨덴 인구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330만 명이며,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해도 약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이렇게 잘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사서비스업(Hushållsnära tjänster)은 그 발전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다<sup>2)</sup>. 스웨덴 내에 가사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비용이

1) Metro, 2011-03-31, "BNP".

2) 스웨덴에서 가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시간 또는 노동

상당히 높아 스웨덴의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주저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가사서비스업이 필요한 시민들은 비용을 절약하느라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글은 우선 2007년 7월에 도입된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웃 국가의 예<sup>3)</sup> 및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업의 발전 상황을 살펴본다. 결론에서 앞으로 이 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도입 배경

스웨덴 정부는 2007년 7월을 기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스웨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Rut-avdrag이라고 칭한다)를 실시하였다. 이는 스웨덴의 일반 시민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약 50%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실상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1993년에 시작되었다. 스웨덴의 여성 경제학자인 안-마리 폴손(Ann-Marie Pålsson)은<sup>4)</sup> 1993년 여름 알메달렌(Almedalen)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가사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건의하였다. 안-마리 폴손은 자신을 비롯한 스웨덴 내 고소득 커리어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빈번히 목격함과 동시에 일부 여성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인 것을 주목하

력의 부족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 일들을 의미한다(구체적인 사례는 본고의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의 정의’ 부분 참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사서비스에 포함되는 육아와 고령자는 대한 복지는 콤포(스웨덴의 행정단위, 한국의 구에 해당)의 사회복지 의무사항이고, 또는 아픈 사람에 대한 간병인 서비스는 대단위 자치정부의 의무사항이라 무료로 제공된다.

- 3)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는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 이미 도입되었다.
- 4) 이러한 정책을 제안한 몇 년 후 안-마리 폴손은 온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 지금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마리 폴손은 사실상 정책을 발제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까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금년 여름 가사서비스제도 도입에 관한 책을 저술하는 동안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고려 중이다.

였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에 가사서비스에 대해 세금감면정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sup>5)</sup>. 안-마리 폴손이 1993년에 제안한 가사서비스에 대해 세금감면정책은 스웨덴 내에서 1990년대 내내 중요한 정치적 토론 대상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좌파의 경우 이런 사회경제정책이 사회계층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1990년대 내내 이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는 우파연정에 속하는 중앙당 당수인 모드 올로프손(Maud Olofsson)이 민간서비스회사 사용자 이익단체인 알메가(Almega)의 지원으로 정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민간서비스회사 사용자 이익단체인 알메가는 가사서비스업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가사서비스에 대해 세금감면을 제공하면 가계가 지출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또 순차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스웨덴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회민주당 정권 막바지인 2005년 스웨덴 경제연구소에서 제도 실시를 추천하였고 2006년 9월 중도우파가 총선에 승리하면서 스웨덴의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sup>6)</sup>.

## ■ 핀란드 및 프랑스의 사례

스웨덴 정부가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웨덴 노동시장정책 및 평가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 연구소는 핀란드와 프랑스의 예를 들며 사실상 이 제도가 고용 증대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웃 국가인 핀란드는 스웨덴보다 이른 2001년에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제도 초창기부터 가사서비스에 대한 정의에 청소, 세탁, 간단한 정원일,

5) Svenska Dagbladet, 2011-03-23, "Rut är nya bamvakten."

6) Ibid.

아이 돌보기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증·개축 공사도 포함하였다. 정책 실시 4년 후인 2005년의 조사에 의하면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000~5,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약 0.1~0.2% 정도의 고용증대를 의미한다. 약 25%의 세금감면 요청은 청소, 육아, 정원일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약 75%는 주택의 증·개축 공사 서비스 이용에 이루어졌다. 고용증대는 특히 증·개축 공사의 경우 뚜렷한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문은 스웨덴의 가사 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핀란드가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실시 이후 이 업종들 중 약 60%가 지하경제에서 일반 경제로 돌아섰으며, 이 60% 중 95%가 건축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가격상승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핀란드에서 고용증대 효과를 측정할 때 이런 요소는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핀란드 가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건축업부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고용증대 효과는 실제 통계보다 더욱 낮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사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응답자 중 70%가 여가시간으로 활용했다고 답변하여,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력공급 효과에 미친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가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인 부문은 지하경제가 일반 경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인데 핀란드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사서비스업의 지하경제 부문이 60%에서 25%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는 프랑스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에서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현황을 보면 주로 대도시, 고소득층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전체 가사서비스의 50%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수도 헬싱키에 가사서비스업 시장의 30%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해 소득수준이 상위 5%에 속하는 가구가 전체 가사서비스의 50%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하위 25%에 속하는 가구는 이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7) Finansdepartementet, 2007-01-31, Remissvar, dnr 156/2006.

## ■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의 정의

사실상 가사서비스의 종류는 상당히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에서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청소, 세탁, 간단한 정원일(주로 여름철 잔디깎기 및 겨울철 눈치우기), 아이 돌보기(구체적으로 어린이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 어린이가 방과후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및 여가 활동 참가에 동반하는 일)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세금감면의 혜택이 부여된다<sup>8)</sup>. 모든 서비스는 가정 및 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세금감면을 요청하는 시민은 개인주택(아파트 포함) 소유자여야 한다. 또한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서 실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 경우 세금감면을 요청하는 본인이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소유자이어야 한다. 제도 초창기에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우선 가사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의 50%를 세금정산 때 세금감면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감면액은 1인당 최고 50,000크로나(한화 약 864만 원)로 제한되어 있다. 또 가사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는 사업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50%만 사업주에게 지불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이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주이건 국세청에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 부문을 환급받도록 하였다<sup>9)</sup>. 추가로 중도우파 정부는 그동안 분리되었던 가사서비스업(Rut-avdrag)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와 주택의 개축, 중축(Rot-avdrag)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통합한 제도(Hus-avdrag)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10)</sup>.

8) 스웨덴 국세청은 법률 해석을 넓게 해, 아이 돌보기를 하면서 숙제를 도와주는 것까지 가사서비스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스웨덴 국세청 Skatteverket, home page).

9) Svenska Dagbladet, 2008-12-03, "Lättare köpa hushållstjänster."

10) Nordea, 2009-06-02, "ROT-avdraget här för att stanna."

## ■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 이용 현황

스웨덴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가사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아직 흔한 일이 아니지만 제도 도입 후 가사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 도입 이후 약 10만 개의 스웨덴 가구가 가사서비스를 구매하였고 약 4만 5,000가구가 추가로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중 약 3만 개의 가구가 국세청에 세금감면 요청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가사서비스업계에서 이렇게 서비스 이용 숫자와 세금감면 요청 신고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세금 신고 기한이 익년 5월 5일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가 증가하였고 회사의 규모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소속 약 85%의 회사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고, 2007년 중 약 600여 명이 이 업계에 취직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 전 실업 경험자로 밝혀졌다<sup>11)</sup>. 2008년과 2009년 사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가계의 비율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0년의 통계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2009년에 비해 적어도 약 80%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가사서비스업계의 노동시장 및 임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세수도 작기는 하지만 증가했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스웨덴 통계청 기관지인 <복지(Välfärd)>가 2009년까지 가사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 특히 85세 이상의 여성들과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을 보면 연간 가계소득이 445,000크로나(한화 약 7,691만 원) 및 그 이상의 가구가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사회민주당을 동조하는 잡지 <Dagens Arena>는 중도우파 정부가 실시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세금감면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sup>13)</sup>.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웨덴의 가사서비스 이용자 현황은 다른 국가의 서비스 이용자 현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특별히 놀란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1) Svenska Dagbladet, 2009-01-31, "Fler köper hushållsnära tjänster."

12) SCB, 2011-03-14, Tidskriften Välfärd nr 1/2011, "RUT-avdrag vanligast bland de äldsta."

13) Dagens arena, 2011-03-29, "Tid att avliva myter."

## ■ 맺음말

지금까지 스웨덴의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서비스에 대해 세금감면정책은 스웨덴 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정책이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총선에서 좌파연합(사회민주당, 환경민주당, 좌파당)이 내건 선거 공약 중의 하나도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총선 결과는 물론 중도보수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다음 총선까지는 현재의 제도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3월 23에 열린 사회민주당 추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사회민주당 당수 호칸 유홀트(Håkan Juholt)가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문제는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중도우파 정권이 실시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을 지지하는 의원 수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2010년 4월에 가사서비스 업계가 스웨덴 3대 도시(스톡홀름, 말뫼, 예테보리)에서 2,20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약 66%가 지지하는 반면, 26%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사회민주당 지지자들 중 이 제도에 대한 지지율은 전체 조사 인원의 지지율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회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42%가 지지하는 반면, 49%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좌파가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로 사회계층 간의 생활수준 격차 심화를 내세우는데 이 의견에는 약간의 모순이 존재한다. 사회민주당은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세금감면(Rut-avdrag)에는 반대하는 반면,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증·개축 등 건축업에 대한 세금감면(Rot-avdrag)에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문을 수리하는 남성은 증·개축 등 건축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창문을 청소하는 여성은 사회계층 간의 생활수준 격차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아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사서비스가 양성평등 증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양성평등은 여러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정치적 측면을 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 간에 권력과 영향력의 균등배분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적극적인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결정에 있어 같은 권리와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무임금 노동을 수행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은 매주 28시간을 가사 업무에 투자하는 반면, 남성들은 매주 20시간을 가사 업무에 투자한다. 여성들이 권력 행사에 남성들과 동등한 접근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이 부업에서 음식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인데,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사서비스는 양성평등의 경제적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 경제적 목표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동등한 조건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사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를 일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업은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로 이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할 경우 임금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여성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들의 수를 늘릴 수 있다<sup>14)</sup>. 현재 스웨덴 기업 경영자의 약 4분의 1이 여성인데 가사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여성 사업주의 수가 증가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sup>15)</sup>. 이와 반대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사서비스가 고소득층에 더욱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양성평등을 높이는 효과가 없으며, 단지 일부 고소득 남성들이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돈을 주고 가정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쨌든 간에 현재 스웨덴 내 가사서비스업은 아직 그 역사가 짧고 또한 규모가 작은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제도를

14) 신규 창업하는 가사서비스업체는 대부분 여성들이 경영하고 있다. 특히 장기실업한 여성들이 취업하는 대신 가사서비스업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창업을 하는 여성들 중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최고 1일 680크로나(한화 약 11만 6,000원)에서 최저 320크로나(한화 약 5만 5,000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최고 223 크로나(한화 약 3만 8,000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동위원회에서는 창업을 위한 정보 교환미팅, 자문,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노동시장위원회, 2010-03-30, Stöd vid start av näringsverksamhet).

15) Svenska Dagbladet, 2009-11-27, "Hushållsavdraget bra för jämställdhet."



완전히 폐지하는 데는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 그 유용성이 증가한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가사서비스업 발전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향상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이 업종의 노동조합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또한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좌파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상으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KLI**